

‘불교중흥의 싹’ 꿈틀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성공”

“진정한 기도는 남을 위한 것”

고대불교 역사 숨결 느끼다

5 불교의 나라 몽골의 오늘

9 김태동 삼화한양식품 대표 이사

17 선지식-해관장사 조실 혜경 스님

18 19 최연식 교수의 실크로드 답사기

“국립공원 명칭 ‘국립’ 빼라”

■대정부 촉구 결의문 왜 나왔나=이번 결의문 채택은 국립공원내 문화재사찰의 관람료 시비로 인해 그동안 문화재와 자연환경 보전의 주역이었던 불교계가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국립공원 중 많은 토지가 사찰 소유임에도 토지 이용권(임대료 등)을 받기는커녕,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각종 규제에 얽매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내에서의 증개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잠을 만큼 잤기에, 이제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현황=2007년 초 정부·여당은 일체 협의도 없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돌연 폐지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합동으로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시켜 활동해왔다. 관계기관(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합동은 조계종이 그동안 요구해온 자연공원법 상 ‘역사문화지구’ 설정이나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관리부처의 합리적 조정, 문화유산의 제도적 체계화 등에는 꾸준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찰 대표소 이진계청 등에 집중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계종은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전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4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2008년 들어 국립공원 제도개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을까지 환경정책연구원에 용

조계종 ‘공원제도개선 대정부 촉구’ 결의

조계종이 국립공원 관리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 개선정책의 수립·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충)는 7월 24일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국립공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사유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것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로 이관할 것 △환경부는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정책 수립·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공원내 문화재사찰의 잇따른 관람료 시비로 곤욕을 치러온 조계종이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과 쟁점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공원제도 개선책 불교계 의견수렴 배제 관리주체 ‘환경부→지자체 이관’ 주장도

역을 의뢰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은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 명칭과 사찰토지 소유권 문제=문화재사찰위원회는 “전국의 많은 국립공원들이 사찰소유 토지로 이뤄져 있음에도 정부는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국립공원이 국가 소유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다수 대중의 등산장소로 제공됨에 따른 제반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등 1급 가치의 토지 대부분은 사찰에서 무상 제공한 땅이며 편입된 토지만도 334.382만(약 110만5400평), 문화재청 임대료 기준(2007년) 산정시 약 1689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에 대한 운영권을 귀속하고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무상편입에 따르 임대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문화재사찰위원회는 “현재 공원관리주체인 환경부는 수질과 대기관리를 기점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수목과 산림에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지자체로 이관해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공원내의 사찰소유 토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기에 이 지역을 문화적 마인드 없이 체육레저나 생태 환경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문화유산이나 경승구역 등을 문화 관련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람료’를 문화재구역입장료로=문화재사찰위원회는 7월 24일 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란 명칭을 ‘문화재 구역 입장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등산객 등이 사찰소유 토지를 이용함에도 ‘관람료’란 용어로 인해 문화재만 안 보면 비용

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관람료관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사찰 관리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9월 임시총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원내 사찰토지 제외’ 주장 배경=문화재사찰위원회는 대정부 결의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립공원 편입으로 인한 수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유적으로 보존 관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립공원내의 사찰토지는 이미 관련법규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규제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더라도 관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관람료 사용내역 부분 공개=올 초 문화재관람료 지출 내역 공개를 약속했던 총무원은 문화재사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개략적인 사용내역만을 공개했다. 조계종 재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76개 관람료 사찰의 대표수입은 330억원이다. 이중 53%는 당해 사찰에서 문화재 관리, 유지·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또 30%는 사찰 건물 등 문화재 보수와 건물 신축 등에 사용되며 이는 종단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여기에 중앙박물관 관리 유지 지원비용 12%, 총무원 문화재관련 교육비 지원 5%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장장직 스님은 “전체 330억 원의 관람료 가운데 53%는 당해 사찰이 문화재 보수와 관리, 유지 등에 사용하고 있어 단위 사찰의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실제 문화재 관리 비용은 1200억~1500억원이 소요돼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



“어청수 청장 참회하라” 항의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검문에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원우회와 시국법회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불자 200여명은 7월 30일 서울 미군동 경찰청 앞에서 어청수 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장영욱 원우회장과 이세용 조계사 총무과장은 어청수 청장과 경찰의 협회를 촉구하는 사발문을 했다. 글·사진=박재만 기자

社告

현대불교 기자모집

현대불교신문사가 취재 기자(신인)를 모집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불교계에서 일할 인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모집부문: 취재기자
- ◆모집인원: 신입 0명
- ◆지원자격: 대졸자 이상
- ◆접수기간: 2008년 8월 15일(금)까지
- ◆문의: 이메일로만 접수 (전화문의 사절)

cgseo@buddhapia.com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상단에 연락처 명시)
-자기소개서
-메일 제목에 [취재기자 지원_이름_연락처] 순으로 명기.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

‘지관 스님 차량 검문’ 불자들이 뿔났다

산문폐쇄 등 경찰에 강경대응 방침 밝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해 우려하던 불교계가 경찰의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차량 과잉 검문에 분노해 2000만 범불교도대회, 산문폐쇄 등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29일 오후 4시경, 차량으로 총무원 청사를 나서던 지관 스님이 경찰에게 제지당하면서 비롯됐다. 총무원측이 사전에 지

관 스님 차량 검문 자체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지관 스님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총무원장 스님 차량일수록 더 검문해야 한다”며 검문을 강행했다. 백주대낮 조계사 마당에서 벌어진 총무원장 모욕 사건에 교계가 발각 뒤집혔다.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조계종 원우회(회장 장영욱) 100여

명이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원우회, 종교편향종식불교연석회의, 시국법회 추진위, 불교종단협의회,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 정부를 규탄하는 교계의 성명서 발표가 줄이였다. 파문이 커지자 조계종은 선방 안거가 해제하는 8월 중순 이후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2000만불교도 대회 구상과 함께 산문폐쇄도 불사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민사·형사·가사·행정

강령회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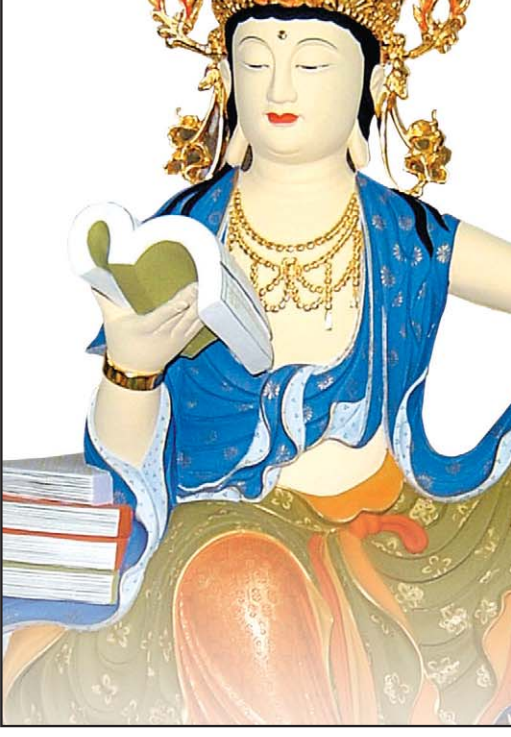
부처님 제1공양
108참회건강 청다향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관백, 솔, 옥, 산요초의 황금빛 향기의 핵을 증류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음 전용 관불수향
울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성불조각원 www.sun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옹두..
- 연, 법상, 목어, 불명예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